

데스크 시각



장필수 사회담당 편집국장

도로와 길은 이동 공간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이용 주체라는 관점에서 보면 다르다. 도로의 이용 주체는 차량이지만 길은 보행자인 사람이 주체다. 도시화가 되면서 도로는 격자형으로 반듯반듯하게 영토를 확장하고 있지만 골목길은 도로에 밀려 자취를 감추고 있다.

골목길을 잠식하는 가장 큰 요인은 아파트 건축이다. 아파트 도시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광주의 골목길은 더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다. 개발 사업자들은 갖은 이름으로 아파트를 지어 골목길을 파괴하고 있다. 재개발이란 미명하에 낡은 주택을 허물어 아파트를 짓고 지역 주택 조합을 만들어 또 다른 주거 지역의 골목길을 파괴하고 있다.

동리단길까지 아파트 들어선다니

지난 3년 사이 광주 동구에서만 학동과 계림동을 중심으로 열 곳에서 재개발 사업으로 추억이 서린 골목길이 사라졌다. 동구에서 진행 중인 재개발 사업지만 14곳으로 1만 6000세대가 추가로 들어선다. 광주에서 지역 주택 조합 사업이 추진 중인 곳도 80여 곳에 달한다.

최근에는 '가로 주택 정비 사업'이란 이름으로 아파

골목길이 도시 경쟁력이다

트를 짓고 있다. 재개발→지역 주택 조합→가로 주택 정비 사업 순으로 이름만 바뀌며 아파트 건립 공사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동리단길로 이름 난 광주 동명동에 가로 주택 정비 사업이 추진돼 논란이다. 가로 주택 정비 사업은 한 블록 단위로 노후 주택을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쉽게 말해 특정 도로 안에 있는 주택이나 상가를 허물고 이곳에 아파트를 짓는 것이다. 개발업자들이 동명동 일대에 두 개의 가로 주택 정비 사업 조합 설립을 위해 주민들을 상대로 동의서를 받기 시작하자 일부 시민들은 반대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동명동 일대에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거주지가 관광화되면서 원주민들이 쫓겨나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을 걱정한다. 사업 부지 일대에는 소규모 땅을 가진 노인들이 많아 조합이 꾸려진다 하더라도 사업비 증액으로 늘어난 분담금을 낼 수 없어 떠나게 될 것이라 우려다. 그러나 광주시민 입장에서 보면 경쟁력 있는 골목길이 사라지는 것이 더 큰 손실이다.

건축학자 유현준 교수는 걷고 싶은 길은 '이벤트 밀도'와 '공간의 속도'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이벤트 밀도는 단위 면적당 출입구 숫자가 많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다는 것이고, 공간의 속도는 사람이 걷는 속도인 시속 4km가 돼야 걷기에 좋은 길이란 얘기다. 천천히 걸으면서 이곳저곳 볼거리가 많은 거리가 경쟁력 있는 길인데 곧 골목길이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유 교수가 말한 걷고 싶은 길 1번지가 바로 동리단길이다. 개성 있는 카페와 레스토랑은 물론 갤러리 등 문

화시설이 복합돼 광주에서 가장 핫하고 힙한 곳이다. MZ세대들이 즐겨 찾으면서 가장 활성화 된 상권으로도 꼽힌다. 공원 같은 문화전당을 매개로 충장로·금남로 상권과 연결돼 있고 양림동 문화예술 마을과도 연계가 가능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곳이다.

로컬 브랜드 살려 광주 경쟁력 갖춰야

골목 경제학자인 연세대 모종린 교수는 동명동-충장로-양림동으로 이어지는 광주의 골목 상권은 수도권을 포함해도 최상위급 골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광주가 회심 상권을 잘 관리하면 로컬 브랜드와 독립 브랜드가 강한 도시가 될 수 있다"면서 "동네, 로컬, 소상공인이 강한 도시가 광주가 추구해야 할 문화도시 모델"이라고 조언했다.

도시의 경쟁력은 결국 골목길에 있다. 성냥갑 같은 아파트와 반듯반듯한 대로로 상징되는 도시화 속에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지려면 경험과 추억을 많이 제공하는 골목길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동리단길을 잠식하는 아파트 건립이 우려스럽다. 지방 소멸 시대라며 인구 유입에만 최우선 가치를 두고 아파트 건립에 힘을 실어 주는 행정 당국의 대응도 실망스럽다.

흔히 지방 소멸 시대라고 하지만 실은 지역 소멸 시대라고 해야 한다. 지방에 있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대도시에 있더라도 경쟁력이 없으면 사라진다는 말이다. 프랑스 사회학자 다비드 르 브르통은 "걷기는 세계를 느끼는 관능으로서 초대"라고 했다. 브르통의 말처럼 걷는다는 것은 주변, 더 확장하면 세계를 온전하게 경험하는 일이다. 동리단길이 그런 경험을 제공하는 곳이다. /bungy@kwangju.co.kr

은편칼럼



목영석 농협경제지주 부장

지난해 여름 배추 한 포기만 원을 오르내릴 때 하나마트에서는 2000원 내외를 할인해서 판매했다. 농업인들을 위한 조치에서 그들의 이익을 최대화시켜 주려면 비싸게 팔아야 할 터인데, 거꾸로 할인 판매를 하고 있으니, 누구를 위한 것이냐는 친구의 전화를 받았다. 학사 경고를 무서워하지 않고 학생운동을 했던 그 친구는 어쩌다 경조사 때 얼굴을 보는 사이지만, 십여 년 전 귀농한 뒤론 농협에 대한 불만을 거칠게 털어 놓곤 했다.

농협법 1조에는 "농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농협의 존재 이유를 적시하고 있다. 농업인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배추 한 포기에 만 원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판매해 많은 수익을 농업인에게 돌려줘야 마땅한 일이

지역 사랑 상품권이 이름값 하려면

다. 그러나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농업인들이 적정한 수익을 올리되, 도시 소비자들이 감내할 수 있는 가격 수준으로 판매해야 하는 것이 법에 충실한 역할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배추 가격이 올라가고, 양파 값이 오르더라도 시중보다 비싸게 팔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도, 친구는 이해하려 들지 않았다.

지난 2월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역 사랑 상품권의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 원 이하로 제한하는 지침을 지자체에 시달렸다. 지역 내 소비 진작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발행되는 지역 사랑 상품권은 지역 화폐, ○페이로 불리며 통상 10% 정도 할인해 발행되어 왔다. 거기에 명절이나 특정 행사 시에는 할인을 더 해주니, 가계마다 구입 열풍이 불어 지난해 발행액이 27조 원을 넘어서기에 이르렀다.

결국 행정안전부는 1인당 구매 한도를 월 7만 원 이내로, 보유 한도는 1인당 최대 150만 원 이내에서 지자체별로 자율 설정하도록 했다. 현금과 등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가맹점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적정 환전 한도를 설정토록 한 것이다.

그러나 주민들이 상품권을 사용할 할 수 있는 가맹점을 연 매출액 30억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제한함으로써 지역 농협이 배제된 것은, 주민 편의를 고려하지 않았

을 뿐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역행할 소지가 크다. 도회지에서야 가맹점이 많이 있다지만 먼 단위 지역에 가면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식당이나 구멍가게 몇 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나이 육십살이 대부분인 농촌 주민들이 상품권 쓰자고 군청 소재지로 나가기도 불편하거나 할인을 준 금액 못지않게 교통비가 들어간다면, 그 인기는 곧 시들해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목적도 달성하기 어려워진다.

배추값을 놓고 힐난하던 친구가 이 글을 본다면 심중팔구는 농협 좋자고 하는 얘기 아니냐며 전화를 걸어 올 것이다. 협동조합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대부분의 내 지인들도, 농협이 문어발식 사업으로 수익을 올려 중앙화로 가져간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나올 만한 얘기다. 그렇지만 1113개에 달하는 지역 농협은 각각 독립된 경영체로 사업을 전개하여 그 수익은 출자한 조합원, 곧 그 지역 주민들에게 배당하여 지역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여느 프랜차이즈업체나 은행들처럼 지역에서 올린 수익을 본부로 이체하고, 그 수익을 소수의 주주들이 나누어 갖는 구조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대의를 저버리지 않으면서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읍면 소재지 주민 편의를 생각한다면, 지역 사랑 상품권이 이름값을 할 수 있도록 현명한 조치를 기대한다.

기고

군 공항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냉철함과 따뜻함

현상을 말한다.

우리 사회는 평택 미군기지 이전, 제주 해군기지 건설, 부안군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 유치 등 주민 기피 시설의 설치 과정에서 많은 갈등을 겪어 왔다. 그래서 우리는 기피 시설이 들어서는 지역과 주민이 입게 될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신에 혜택을 많이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군 공항은 소음, 안전성 등의 문제로 주민 기피 시설임에 틀림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평군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지역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광주군 공항 유치를 고민하고 있다. 주민 설명회도 여러 차례 열렸다. 합평군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군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일은 당연한 책무다. 군 공항 유치의 장·단점을 분석해 군민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 충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 줘야 한다. 이는 군 공항 이전 반대 입장을 보이는 무안군도 마찬가지다. 일방적인 반대 주장만 받아들인다면, 찬성의 '찬'자도 못 깨닫게 하고 논의의 장도 배타시키는 것은 성숙한 민주 시민의 자세는 아니다.

주민 기피 시설인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은 이전 지역 주민들이 수용하고 소음 등 피해를 극복할 수 있을 만큼의 획기적인 지역 지원 대책을 먼저 마련하는 것이다. 일시적인 지원이 아닌 삶의 터전을 잃고, 후손 대대로 물려줄 수 밖에 없는 지역에 지속 가능한 지역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가 2005년 당시 인센티브를 먼저 제시하며 지자체 간 유

치 경쟁이 일어났던 경주시 방폐장(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건립 사례를 참고했으면 좋겠다.

이에 그동안 전남도는 정부와 광주시에 하여금 이전 지역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인프라, 신도시 조성과 지역 주민 편의 시설, 이주민 생계 지원 등 획기적인 지원 대책을 먼저 마련하도록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것이다. 일부에서는 군 공항은 이전하고 민간 공항은 그대로 존치하자는 주장도 펼치고 있으나, 이는 '기부 대양'이라는 군 공항 이전 특별법상의 대원칙과 정부의 '공항 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을 완전히 무시하고 전남도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요구하는 주장일뿐이다.

2016년 광주군 공항 이전 건의서의 군 공항 이전 사업비에 대해 2021년 국무총리실에서 재산출 용역을 시행하고 이전 지역 지원 대책을 협의하기로 했으나, 전남도에 결과 공유조차 안 되고 협의가 진행되지 않은 정도 아쉽다. 이전 지역에 대한 직접적 지원책만 아니라 이주 대책과 비용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국방부·광주시·전남도 간 3자 협의회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군 공항 이전을 간절히 바라는 광주시는 248만 평에 달하는 광주군 공항과 민간 공항 부지에 들어설 신도시의 장밋빛 미래만 꿈꾸지 말고 현재 광주시민이 겪고 있는 불편함을 그대로 겪을 전남 지역민을 항상 마음속에 품어야 한다. '기부 대양'에 따른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전남이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이전 지역과 주민을 위한 획기적인 발전 대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심사숙고해야 한다.

社說

'군 공항 특별법' 공포...이전 지역 지원책 보완을

광주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어제 공포돼 오는 8월 말부터 시행된다. 특별법은 군 공항 이전 예산을 종전 부지 개발에서 발생하는 재원으로 충당하는 현행 '기부 대양' 방식을 보완, 부족한 사업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사업 추진의 실질적인 동력이 될 이전 대상지에 대한 구체적 지원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그제 기자간담회를 열어 광주군 공항 이전에 대한 전남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천명하면서 이전 대상지 선정을 위한 네 가지 전제 조건을 제시했다. 광주 민간 공항의 무안 이전, 이전 대상지에 대한 통 큰 지원책 제시, 무안군내 공정한 논의의 장 마련, 이전 로드맵 사전 협의와 속도 조절 등이 그것이다.

김 지사는 우선 광주군 공항 이전을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연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 민간 공항을 무안공항으로 옮겨 서남권 관문 공항으로서 경쟁력을 강

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광주시가 이전 대상지에 대한 통 큰 지원책을 먼저 내놓는다면 전남도 역시 그에 맞게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 역시 지난 13일 특별법 국회 통과 직후 "이전 후보지 선정을 위해 광주·전남 지도자들이 미래를 위해 결단해야 한다"며 군 공항 이전 및 종전 부지 개발 추진본부 설치 등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문제는 특별법에 군 공항 이전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 내용과 비용 등 국가적 의무가 규정되지 않아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도시 인프라 및 주민 편의시설 확충, 이주민 생계 지원 등 획기적인 지원 대책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소음 피해 등에 대한 이전 지역 주민들의 우려와 반대를 해소하기 어렵다. 따라서 광주시·전남도와 정치권은 특별법 시행에 앞서 군 공항 이전 지역에 대한 국가 지원 사업과 명확한 인센티브 내용 등이 시행령에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학부모 부담 키우는 교복 입찰 담합 근절해야

광주 지역 교복 판매·대리점 업주 31명이 중·고교 교복 값을 담합해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부터 3년 동안 지역 중·고교 147곳에서 발주한 161억 원 규모의 교복 구매 최저가 경쟁 입찰 387차례 가운데 289차례에 걸쳐 담합을 했다. 3년 동안 이들이 챙긴 부당 이익은 32억 원에 달한다.

교복 납품 업체들은 입찰 공고가 나오면 함께 투찰(가격을 적어 내 입찰하는 방식) 가격을 공유해 정해진 특정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전에 낙찰받을 학교를 배분한 후 낙찰 예정 업체와 대리점들을 정해 놓았다. 이후 들러리 업체는 낙찰 예정 업체의 투찰 가격보다 근소한 차이로 높은 가격을 적어 냈다.

이처럼 교복 납품 업체들이 최저가 경쟁 입찰에서 담합함으로써 2014년 '교복 학교 주관 구매 제도' 시행 초기 평균

70%대이던 투찰률이 95%로 상승했다. 이들은 '교복 학교 주관 구매 제도' 도입에 따른 가격 폭락에 재반응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에 따르면 담합을 시작했다고 한다.

업체들의 담합으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 학부모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 담합이 없을 때 평균 23만 7588원에 구매 가능했던 것이 담합을 통해 평균 29만 6548원으로 24%나 상승했다. 매년 학부모들은 6만 원 가량 비싸게 주고 자녀들의 교복을 구입한 셈이다. 또한 각 지자체 들은 중·고교 입학생들에게 입학 지원비 또는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어 혈세 낭비로까지 이어졌다.

중·고교 학생들의 교복 구매가 어른들의 일확천금 상술에 농락당했다. 학부모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이러한 교복값 담합 행위는 근절돼야 마땅하다. 광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불공정 담합이 이뤄졌을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無等鼓

영화 '남한산성'은 조선시대 청나라 침략이 있었던 병자호란이 시대적 배경이다. 영화는 순간의 치욕을 견디고 청과의 화친을 통해 후일을 도모하려 하는 주화파와 청에 끝까지 맞서 싸워 대의를 지키고자 하는 척화파의 날카로운 논쟁과 갈등이 백미다. 이들 주장의 옳고 그름을 넘어서 '무엇이 지금 백성을 위한 선택인가'에 대한 고민과 화두를 던졌다는 게 이 영화에 대한 평가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이 시작됐다. 대통령실은 이번 방문의 의미를 한미 동맹 확대에 맞추고 북한에 대한 위협에 맞선 확장 억제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기대 반, 우려 반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앞선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강제 징용 제3차 변제' '화이트 리스트 국가 복원' 등 사실상 일본에 '피주기 외교'만 하고 한국은 정작 일본이 없었던 것처럼 많았기 때문이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는 강제 동원 같은 일본 정부의 잘못은 가리고, 독도 영유권 주장은 한층 더

노골적이다. 특히 우리 정부가 일본을 수출 우대 국가 목록,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에 다시 포함했지만, 일본은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 국가로 복원하는 것에 대해 여전히 신중론을 펴고 있어 국민들을 더욱 화나게 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은 윤 대통령의 이번 미국 방문을 주목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에 대한 고민과 화두를 던졌다는 게 이 영화에 대한 평가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이 시작됐다. 대통령실은 이번 방문의 의미를 한미 동맹 확대에 맞추고 북한에 대한 위협에 맞선 확장 억제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기대 반, 우려 반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앞선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강제 징용 제3차 변제' '화이트 리스트 국가 복원' 등 사실상 일본에 '피주기 외교'만 하고 한국은 정작 일본이 없었던 것처럼 많았기 때문이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는 강제 동원 같은 일본 정부의 잘못은 가리고, 독도 영유권 주장은 한층 더

실리 외교

불이익을 받고 있고, 국내 반도체 산업도 미국과 중국 간 반도체 전쟁으로 인해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는 윤 대통령이 이번 방문에서 풀어야 할 숙제다. 그래야 윤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실리 외교'가 성공할 수 있다. 미국과 중국·러시아, 서방 국가 간의 대립이 이어지는 신냉전 시대가 도래한 지금, 우리나라 외교 정책도 영화 남한산성이 던졌던 '무엇이 지금 백성을 위한 선택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권일 정치부 부국장 cki@



문근주 전남도 행정부지사

지난 13일 '광주군 공항 이전 및 종전 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군 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의 근거가 마련됐다. 광주시는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광주군 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으며, 이에 따라 사업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 역시 군 공항 이전에 소요되는 재원 중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특별법 통과를 환영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비용 등 군 공항 이전 지역 지원에 대한 국가적 의무가 규정되지 않는 등 아쉬운 부분도 있어 정부·전남도·광주시가 머리를 맞대 시행령 제정 등으로 반드시 보완해가야 할 것 같다.

주민 기피 시설을 말할 때 님비(NIMBY: Not In My Back Yard, 내 뒷마당에는 안 된다), 룰루(LULU: Locally Unwanted Land Use, 지역적으로 거부하는 토지 이용)와 같은 용어들이 떠오른다. 이는 건강상 피해, 환경 오염, 지가 하락과 같은 부정적인 효과를 유발하는 시설을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Table with 4 columns: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權,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and contact information for circulation and advertising.